

# 지방 대학 연구활성화를 통한 과학기술자 사기 진작

이은경([eklee@chonbuk.ac.kr](mailto:eklee@chonbuk.ac.kr))

전북대학교 과학학과 교수

## 1. 서론

이공계 기피 현상은 최근 2-3년간 많은 사회적, 정책적 관심을 모은 이슈 중 하나다. 알려진 대로 이공계 기피 현상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자연계열 응시자 수가 급감한 데서 세간의 주목을 끌게 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 과학기술 교육 및 과학기술인력과 관련된 모든 현안과 관련되는 정책 현안으로 부상했다. 그 과정에서 이공계 기피 현상의 핵심과 주요 원인이 여러 각도에서 분석되었고 그러한 분석에 기초해 다양한 대응책들이 제시되었다.

과학기술자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관심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민철구 외, 2001; 국과위, 2001.7). 1990년대를 통해 이공계 전공자와 인문사회 계열 전공자의 소득격차, 그리고 이공계 내에서도 연구개발직과 의사 등 보건의료 관련 직종들 사이에 직업안정성 및 소득 격차가 꾸준히 발생하고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이공계 전공에 대한 선호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가 및 직업안정성 감소, 그리고 기업의 연구개발인력 구조조정 등은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공계 기피 현상은 이전부터 제기되던 과학기술자 사기진작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송위진 외, 2003).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자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이 다양하게 제시되었고 현재 추진 중이다. 예를 들어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응이었던 2002년의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 방안”에는 과학기술자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으로서 과학기술인 공제회 설립,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의 연구비와 인건비 확대, 연구원 정년 후 연장계약제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출연(연) 연합대학원 설립, 과학기술자 고위공직 진출 확대, 과학기술자 명예의 전당 설치가 추진되었고 과학기술자들의 연구성과와 사회적 기여에 대한 재평가와 홍보 활동도 전개되었다(국과위, 2002.7).

이 정책들은 전체로서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과학기술자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들은 과학기술자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고 앞으로 보다 세분화된 정책들이 뒤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자 사회는 연구 조건과 사회적 조건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과학기술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서로 다른 요구사항과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기업, 출연(연)을 비롯한 공공연구소, 그리고 대학의 상황은 서로 다르므로 각각의 기관에 속한 과학기술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현황파악에 기초하여 세분화된 정책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과학기술자들 중에서도 대학, 특히 지방 소재 대학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과학기술자들의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지방 대학교의 경우 연구개발 주체로서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와 수도권을 중심

으로 연구개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이 안고 있는 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연구개발 주체로서 대학 일반의 문제, 그리고 대학 내에서 지방 대학의 문제를 분석해야 하고, 동시에 지방 대학 내에서도 국립 vs. 사립 및 지방 vs. 지방의 차이에 따른 문제도 고려될 것이다.

## 2. 대학

### 1) 대학의 직무만족도와 연구환경

과학기술자 사기진작 정책을 수립할 때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정책 대상의 설정, 즉 과학기술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다. 흔히 인용되는 OECD의 정의에 따르면 과학기술자는 대학 이상의 이공계 교육을 받았거나 그와 동일한 자격 조건을 요구하는 과학기술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다. 그러나 이 정의는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좀더 좁게 학사 이상의 교육을 받고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되는 연구개발인력을 과학기술자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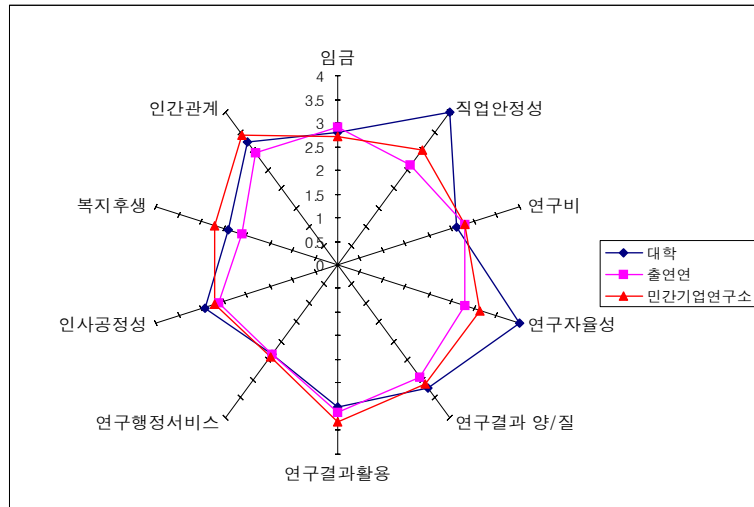
과학기술자를 연구개발인력으로 볼 경우 대학은 두 가지 큰 특징을 가진다. 첫째, 대학에 속한 과학기술자는 기업에 비해 절대수는 작으나 석사 이상의 고급 과학기술자들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둘째, 박사급 이상의 과학기술자들의 대다수가 직장으로서 대학을 가장 선호한다. 즉 대학 교수가 과학기술자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사기가 높다는 뜻이다. 따라서 기업이나 공공연구소에 비해 대학의 연구환경 및 직무만족도를 개선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작은 투자를 통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학의 연구환경 및 직무만족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자. 산학연의 과학기술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임금, 직업안정성, 연구비 및 장비, 연구자율성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학의 직무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각 항목의 가중치가 같다고 가정할 때 대학, 기업, 출연(연) 과학기술자의 직무만족도는 각각 3.0, 2.9, 2.7로, 대학 교수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 참조).

또한 대학 교수들은 상대적으로 이직을 고려하는 비율이 낮고 이직할 경우에도 창업 등의 경력경로 변경보다는 연구여건이 나은 다른 대학으로의 이직을 선호한다. 반면 출연(연)과 기업연구소의 과학기술자들은 이직 희망 비율도 높고 창업 등 경력경로 변경이나 주로 대학으로의 이직을 희망했다(<표 1> 참조). 이처럼 대학의 과학기술자들의 만족도가 일반적으로는 높은 데에는 연구자율성과 직업안정성, 사회적 지위와 존경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이은경, 민철구, 2002).

---

1) 이 설문조사는 대학과 출연연의 경우 각각 교수와 박사급 연구원을 대상으로 했으며, 기업의 경우 학위 구분 없이 무작위 추출한 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그림 1> 각 연구기관별 과학기술자들의 직무만족도  
 자료: 이은경, 민철구(2002)

<표 1> 이직 희망자들의 희망이직처

(단위: %)

	다른 출연(연)	다른 기업	다른 대학	창업	기타
대학(19명)	12	6	65	6	12
출연(연)(54명)	2	6	61	28	4
기업(58명)	10	26	12	48	3

자료: 이은경, 민철구(2002)

반면 대학 교수들이 가장 불만을 느끼는 요인은 연구비와 장비, 그리고 낮은 보수로 나타났다. 대학 교수들은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요소로써 연구비/장비의 문제를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48.5%)로 지적했으며, 연구지원 서비스를 지적한 비율도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2> 참조)(이은경, 민철구, 2002) 즉 대학 교수들의 경우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한 물질적, 제도적 요인에서 가장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좀더 나은 연구환경을 위해 대학 교수가 누리는 연구 자율성이나 직업 안정성을 포기하려는 의사, 예를 들어 연구비와 장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출연(연)으로 이직할 의사는 별로 없었다. 대학의 과학기술자들은 현재보다 좀더 연구환경이 좋은 다른 대학으로의 이직만을 주요 고려 대상으로 삼는다.

<표 2> 연구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요소 1순위

(단위:%)

	임금	직업안정성	연구비/장비	연구자율성	연구결과의 질/활용도	연구지원 서비스	합계
대학	12.1	8.3	48.5	14.4	10.6	6.1	100
출연(연)	22.5	11.7	25.2	27.0	9.9	3.6	100
기업	15.4	21.0	14.0	21.0	21.0	4.9	100

자료: 이은경, 민철구(2002)

이러한 사실은 실제 한 번 이상의 이직을 경험한 적이 있는 대학교수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확인되었다. 모든 응답자들은 개인의 성장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이직 동기로 꼽았다. 흥미로운 점은 두 번째 이직 동기에서 출연(연) 또는 기업에서 대학으로 이직한 교수와 대학간 이직을 경험한 교수의 응답의 차이다. 출연(연)과 기업에 있던 연구원이 대학으로 이직하게 된 두 번째 큰 동기는 각각 직업안정성(33.3%)과 연구자율성(19.4%)인데 반해 대학간 이직의 경우 직장의 위치(24.0%)로 나타났다(고상원 외, 2001)

두 설문 결과는 결국 대학교수들은 가능하다면 대학간 이직, 즉 지방에서 서울 또는 수도권으로, 연구비와 장비가 더 좋은 대학으로 이직을 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또한 대학의 연구환경이 수도권으로 갈수록 좋아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박사학위자의 70%가 집중되어 있는 대학의 연구환경 개선과 이를 통한 대학의 과학기술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수도권 소재 대학과 지방대학, 국립대와 사립대의 연구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 2) 지방대학의 역할

우리나라 과학기술 활동의 특징 중 하나는 수도권과 대전지역 집중 현상이다. 왜냐하면 연구개발인력과 연구개발조직의 수도권 및 대전 지역 편중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2000년 현재 수도권 및 대전 지역에 연구개발비의 75.2%, 연구개발인력의 66.1%, 그리고 연구개발조직의 67.3%가 집중되어 있다. 정부의 지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도권과 대전지역 집중 현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이 더욱 문제다. 기업 연구소의 경우 2001년말 현재 전체의 7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출연(연) 역시 수도권과 대전 지역에 80% 이상 집중되어 있다. 다시 말해 수도권과 대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에는 신진 연구개발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연구개발 주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과학기술 활동을 위한 가용 자원도 미약하다.

기업연구소와 공공연구소가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은 지방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지방에서 배출하는 인력을 중간단계에서 흡수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다. 지방에는 역사가 오랜 대규모 국립대학들이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대학의 60%만이 수도권과 대전에 위치하고 있다. 양적으로는 산학연 중 대학의 수도권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다. 실제 석박사급의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배출하고 연구개발인력으로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에서는 사립대학, 지방에서는 국립대학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대학의 연구개발인력의 경우 전체의 약 45%만이 수도권 대학에 속해 있으며 나머지 55%는 지방 소재 대학에 분포하고 있다(<표 3> 참조). 또한 박사학위자 배출에서도 수도권에서는 국립대학의 비중이 12-13%, 사립대학의 비중이 33-40% 수준에 이르고, 지방에서는 국립대학의 비중이 30-36%, 사립대학의 비중이 17% 수준에 이른다(<표 4> 참조). 따라서 지방 대학의 연구환경을 수도권 대학에 비해 손색이 없도록 개선함으로써 지방 대학 교수들의 직무만족도 제고와 사기진작을 이루고 더 나아가 지방 과학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표 3> 지역별, 연구개발 주체별 연구개발인력 분포

(단위: 명, %)

구 분	연구개발인력	수도권	영남	충청	전라	강원, 제주
총계	237,232	134,827	43,907	36,332	15,060	7,376
		(56.8)	(18.5)	(15.3)	(6.3)	(3.1)
공공연구소	21,563	8,364	2,525	8,792	1,248	634
		(38.8)	(11.7)	(40.8)	(5.8)	(2.9)
대학	100,643	45,108	24,163	15,331	10,533	6,088
		(44.7)	(24.0)	(15.2)	(10.5)	(6.0)
기업	115,026	81,445	17,219	11,939	3,779	644
		(70.8)	(15.0)	(10.4)	(3.3)	(0.6)

자료: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2002)

<표 4> 전국 대학 이학/공학 박사학위 배출 현황

(단위: 명, %)

구 분		이학		공학	
		학위자	비율	학위자	비율
국(공)립	수도권	155	12.7	280	13.1
	지방	<b>366(76)*</b>	<b>30.0</b>	<b>769(290)*</b>	<b>36.0</b>
	소계	521	42.7	1,049	49.1
사립	수도권	480	39.4	708	33.1
	지방	<b>218(31)**</b>	<b>17.9</b>	<b>379(84)**</b>	<b>17.7</b>
	소계	698	57.3	1087	50.9
합계		1,219	100	2,136	100

자료: 교육통계연보(2003)

주: \* KAIST 졸업생, \*\* 포항공대 졸업생

### 3. 지방대학의 연구환경

#### 1) 우수 인력 이탈과 연구기반 약화

현재 대부분의 지방 대학은 학부생 및 대학원생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방 대학의 연구기반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방 대학의 학생 이탈은 신입생, 편입생, 대학원생 등 모든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어 교학력으로 갈수록 재적학생수가 급감하는 이른바 '새는 파이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2004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4년제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신입생 충원 비율 하락 속에서 지방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불과 83.7%로써 수도권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97.7%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인적자원부, 2004.6). 또한 서울 소재 대학들이 학생 충원을 위해 적극적인 편입생 유치 전략을 구사함에 따라 일단 지방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도 이탈이 일어나고 있다. 2000년 1학기에 서울 소재 대학의 편입생 중 61.3%, 2학기에는 55.5%가 지방 대학 출신이었다(조현대 외, 2003)

대학원 진학 시 학생들의 지방대학 이탈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2002년의 경우 비수도권 대학의 학부졸업생은 전체의 59%인데 반해 대학원 졸업생은 전체의 47%밖에 되지 않아 10%

이상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 연구개발 조직 및 연구개발을 위한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구직 가능성이 높고, 둘째, 대학원 중심대학, BK21 사업 등의 요인으로 인해 수도권 대학들의 대학원 정원 및 타대학 출신 입학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의학/치의학 전문 대학원 제도 역시 지방대학의 우수 인력의 이공계 이탈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국립대학에는 대규모 의과/치과 대학이 있다. 이 대학들은 현재도 지역에 남는 우수 청소년을 대거 흡수하고 있는데,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이 활성화되면 대학 진학 뿐 아니라 대학원 진학에서도 지방의 우수 인력을 대거 흡수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본교 출신 학생에 대한 입학 쿼터제를 실시하게 되면, 학부의 경우 우수 학생 유치 및 이탈 방지에는 일정한 효과를 거두겠지만 이공계의 우수 학생 이탈 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다.

학생들, 특히 우수 학생들의 지방 대학 이탈은 지방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연구의 수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결과는 지방 대학의 위상 저하 및 지방 과학기술의 침체로 나타날 것이다. 이는 다시 우수 학생들의 지방 대학 이탈 및 수도권 집중으로 나타나는 악순환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지방 대학의 대학원생 감소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일부 학과에서는 교수 1인당 대학원생이 1명도 되지 않는 현상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대학원생의 절대 부족 상황에서는 지방 대학 교수들이 비록 연구역량에서 경쟁력 있고 연구비 지원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훌륭한 연구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연구개발 활동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팀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연구활동을 통한 자기성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학 교수들의 지방 대학 이탈 또는 연구사기 저하가 불가피하다.

지방 대학에서는 대학원생 뿐 아니라 대학 연구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전임 박사급 연구원들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사급 연구원들 역시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연구경험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고,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추어진 수도권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방대학의 박사후 연구원 중 외국인과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04년 현재 전북대의 박사후 연구원 중 60% 정도가 중국과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이며, 전체의 20%가 여성이다<sup>2)</sup>.

## 2) 취약한 연구개발 인프라

지방 과학기술 진흥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 기조 가운데 하나지만 아직까지는 지방의 연구개발 인프라가 취약하며 이는 지방 대학의 연구활동을 저해하는 또 하나의 요소로 작용한다. 정부는 지방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기술혁신센터(TIC), 창업보육센터(TBI),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지역 컨소시엄, 지역협력연구센터(RRC) 등의 형태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지방대학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은 지방 중에서도 산업기반이 어느 정도 잡혀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vs. 지방 뿐 아니라 지방간 격차가 커질 위험성이 있다. TIC나 TBI 같은 사업은 기존 산업기반이 있는 지방이 유리하기 때문에 수도권 및 기존 산업단지 인근 지방 소재 대학과 연구소에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방 대학을 위한 지원사업의 경우 대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자금(matching fund)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어느 정도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인식과 경험, 그리고 정책 의지가 있는 지방에서 더욱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지방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통해서 수도권 vs. 지방의 불균형은 어느 정도 시정될 수 있을지

2) 전북대 연구인력 현황에 관한 내부 자료

모르지만, 대학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정선양, 2000).

지방 대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위한 행정서비스 및 제도적 인프라가 취약한 점도 지방 대학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 중 하나이며 연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방간 차이는 있겠지만, 지방 대학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마인드가 아직도 형성 초기 단계에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 경험이 풍부한 수도권 대학에 비해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지원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 연구개발사업의 구조, 연구개발 사업의 내용 및 수행 방식의 변화 등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 활동을 위한 각종 행정 업무 등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다. 따라서 대학원생 감소 등으로 인력이 부족한 대학 교수들에게 연구활동 이외의 추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서 연구지원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응답을 한 비율이 대학교수(6.1%)의 경우 출연(연)(3.6%)이나 기업연구소(4.9%)의 과학기술자에 비해 높은 것은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한 지표다(이은경, 민철구, 2002).

### 3) 연구 네트워크 부재와 지방간 불균형 심화

과학기술 활동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는 산학연의 연구조직 및 동료 과학기술자로 구성된 연구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어렵다. RRC 같은 프로그램이 연구팀을 구성할 때부터 산학연의 공동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주체들이 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방 대학에서 산학연 협력을 위한 연구 파트너를 찾는 것조차 쉽지 않으므로 효과적인 협력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의 연구 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 주체가 추가로 발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기업 연구소의 지방 유치에 위한 노력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설립, 지역 특화 산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의 교육 및 연구 환경 조정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립대학보다 연구여건이 더욱 열악한 지방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의 교수들이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와 연구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 전담기구 설치 등 과학기술 활성화를 위한 행정 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정부 지원 획득 및 대응 자금 등 직접적인 연구개발 투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과학기술 투자와 활동 여건이 대체로 취약한 것은 사실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지방간에도 격차가 존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연구소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 정부의 지원사업 역시 새로운 혁신 주체를 개발하기보다 기존 주체들의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므로 이미 형성된 산업단지가 있는 지방과 그렇지 못한 지방간에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TIC의 경우 2001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TIC 38개소 중 서울(6), 충남(5), 경남(4)에 다른 지역보다 많이 설치되어 있다.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지역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제조업체 진출이 부진한 지방, 예를 들어 강원도와 전라북도 등에서는 사업 참여 자체가 상대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조현대 외, 2003).

### 4. 지방 대학 연구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과학기술자들 중에서는 대학 교수의 직무만족도와 사기가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들이 중시하는 연구환경 개선을 통한 연구 활성화가 시급하고 효과적이다. 특히 지방 대학의 연구 활성화는 대학의 과학기술자들의 사기진작과 지방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다. 이러한 인식 아래 지금까지 지방 대학의 연구 환경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석사 이상의 고급 과학기술자 배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의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 연구개발 연합체를 구성함으로써 지방의 연구 네트워크 씨앗 형성과 연구 교류 활성화를 촉진한다. 대학 교수들의 연구역량에서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간, 특히 지방 사립대학간의 격차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 대학에서는 대학원생의 감소 또는 부족과 이탈, 박사후 연구원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실제 연구 수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분야별로 같은 지방 소재 대학 교수들이 연합하여 연구팀을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립대학간 연합대학 추진이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경우 기관간 통합에 따르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역량있는 지방 사립대학이 소외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축적이고 융통성 있는 방식의 학과별, 분야별 연구개발 연합체 구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지원 또는 대학원생 부족을 보완하고 실제 연구 수행에 참여할 전문 테크니션 인력 지원 같은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둘째, 지방 대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부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대학 교수들의 주된 역할을 교육과 연구로 구분하고 각각의 역할에 맞는 평가 기준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연구 여건이 수도권 대학에 비해 현실적으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학의 교수들과 같은 기준에 의해 평가되므로 지방 대학교수들은 연구 수행에서 더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수들의 능력과 희망에 따라 교육과 연구 중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성과 평가 및 보상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일부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의 전담 교수와 차이는 지방 대학의 전임 교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 방안은 지방대학의 학부 교육 내실화와 동시에 제한된 지방 대학의 연구개발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지방 대학에서 여성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대학의 연구 분위기 활성화 및 지역의 우수 인력 이탈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 대학의 경우 학부와 대학원 모두 이공계에서 여학생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에 잔류하려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우수 여성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인력 부족 현상 해소와 연구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 특히 우수 여학생에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여성 과학기술자의 대학 교수 임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대학의 연구개발 행정 서비스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공무원과 지방 대학 직원들에 대한 연구개발 행정 실무 관련 연수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관련 전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지방 대학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정책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지방 대학 교수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다섯째,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으로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방 대학이 그 중심 주체가 됨으로써 지역의 인재 이탈을 방지하고 지방 출신 인재가 해당 지방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고상원 외(2001), 고급과학기술인력의 학연산 유동성 실태조사 및 제고방안(과학재단).
- 교육인적자원부(2004.6.) “2004학년도 대학입학 등록 현황”.
-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01.7), “출연(연) 활성화 및 사기진작 종합대책”.
-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02.7)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 방안”.
- 김용환(2003), 지방대학 R&D와 지역혁신 활성화를 위한 고찰(STEPI).
- 김현기(2002), 중소기업지원 산학연 협동연구 개발사업의 애로요인 조사분석 연구(STEPI).
- 민철구 외,(2001), 과학기술자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방안(STEPI).
- 송위진 외,(2003), 한국 과학기술자 사회의 특성 분석(STEPI).
- 이은경, 민철구(2002), “과학기술자들의 연구환경과 직무만족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과학기술정책』 12.1, pp. 104-117.
- 정선양(2000), 지방 과학기술 진흥정책 성과 제고방안(STEPI).
- 조현대 외,(2003), 과학기술의 질적 제고 및 불균형 완화(STEPI).